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고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출범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가 건설노조 단속에 적극 활용됐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이후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다.("200일 전쟁" 선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간 싸워서 임금을 인상하고 조직을 확대해 왔다.

예컨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 전기 노동자들은 50일간 현장 투쟁, 거리 시위, 한전 본사 점거 등을 벌여 임금을 인상시키고 유급휴가를 얻어 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2016년 2만 5000여 명에서 현재 8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윤석열이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싶어서다.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공사 현장 점거, 출입 통제(일종의 대체인력 저지), 태업 등의 방법으로 투쟁해 왔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런 투쟁 방식을 "폐법", "불법"이라며 매도하지만, 파업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서구에서 "피케팅"이라고도 불리는 투쟁 방식으로, 국제 노동운동에서 역사가 깊은 전술이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다른 노조에



비해 점거 파업과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자주 벌여 왔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개약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노동개약안도 정의행위에 대체인력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현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 한다.

정부는 건설노조 같은 투쟁적인 부위를 공격해 노동자 투쟁 전반을 위축시키고, 파업 효과를 떨어트리려 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조직력이 좋은 부분들(부산·울산 지역의 건설기계, 수도권 토목·건축)을 집중 공격한 것도 이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이 누리는 조건과 권리는 집단적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지켜 온 것이다. '법치' 운운하며 정당한 투쟁을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까

히 갖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로 난처한 상황에서 물가 인상, 친미 외교 등에 대한 대중의 반감으로 지지율이 낮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노조 공격과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보며, 윤석열이 권좌에 남아 있는 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 여기고 있다.

건설노조는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 투쟁을 수만 명 규모로 벌일 예정이다.

이번 건설노조 투쟁이 확대된다면 정부의 노동개약 드라이브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월 13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16~17일 상경 파업 소식을 알리자, 집회 참가자들이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퇴진 요구를 내걸었지만 그에 걸맞은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대 파업은 고사하고 연대 투쟁 강화를 위한 계획도 미흡하다.

윤석열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개약 추진을 위한 속죄양 삼기이자 전초전이다. 윤석열 정부가 열사의 죽음에도 냉혹하게 노동개약과 건설노조 공격을 벌이는 만큼 우리 편도 연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답이다.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해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조 사무실 15곳을 압수수색했고, 16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0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분노

정부는 5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자신감을 충분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윤석열의 앞날과 혁명적 좌파의 전망,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방어해야, 윤석열이 한국 판 대치가 될 수 있을까?, 영국 군주제 반대 시위 탄압이 보여 준 것, 전세사기, 간호법 논란,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수단 내전, 칠레 제헌의회 선거 결과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강통전세 피해자들은 이토록 절박한데 정부·여당은 계속해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에는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구제해 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

정부의 대책은 대출을 해 줄 테니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경매에서 먼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대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안대로라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대부분 잃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세입자보다 앞서서 근저당이 없어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미 전셋값보다 집값이 떨어진 강통전세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원치 않는 집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매를 원하지 않고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LH가 집을 낙찰받아 피해자가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원 대상이 되려면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피해자를 나누고, 다수의 집단 피해와 소규모 피해를 나



누고, 보증금 액수 등을 따져 피해자를 골라내겠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안을 “피해자 걸러 내기”라며 비판하는 이유다.

전원·전액 구제하라

정부·여당은 “혈세 낭비”라거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들 간의 사기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을 쓰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 붐을 조장해 왔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육성하며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자 겹 투자를 통해 많은 주택을 보유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세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인 만큼 마땅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들은 공공기관이 나서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상해 주고, 추후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자는 안을 내 왔다.(선 구제, 후 회수) 물론 이는 정부의 안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보상해주는 전세 보증금의 액수를 채권 기관의 심사를 통해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안이다.

정의당은 전세 보증금의 50퍼센트 이상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며 민주당보다는 나은 안을 냈지만, 이조차 피해자들의 손해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대상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전세금 50퍼센트 보전안보다 후퇴한 방안이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등과의 협상에 치중하다 보니 진보 정당들도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후퇴

가 보증금을 다 떼이게 생긴 세입자들에게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선한 의도일지라도, 이런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 합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큰 손실을 봐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고립돼 향후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좋지 못한 합의를 하기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국회 안에서 협상을 우선하며 요구안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

▶ 추천 동영상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명석 짚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시사/이슈 특독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명석 짚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youtu.be/UxY7v53PTI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10강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일시 | 5월 17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5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